

“광주·전남은 한뿌리”…힘 실리는 행정통합론

강기정·김영록 ‘공동 추진기획단’ 공식화…논의 전면화
통합선거론 부상…인구 320만·GRDP 150조 초광역 구상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란히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을 공식화하며, 기능 협력 단계를 넘어 통합을 전제로 한 실질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광주·전남에서도 통합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기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 시대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

를 통해 즉각 화답했다.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자”며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이라도 만나 추진기획단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유지해 온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 기초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는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30년 지방선거를 ‘통합 광주·전남’ 체제로 치르자는 통합선거론을 공개 제안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단체장 임기 동안 통합을 완성해 2030년 선거를 통합 단일 체제로 치르자는 구상이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력한 통합론을 펼치고 있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역시 “차기 단체장 임기 4년 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빛으로 물든 광주송정역
30일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화려한 빛으로 장식된 대형 성탄트리와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광산구는 송정역 일대를 시민이 머무는 겨울철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성탄문화축제와 함께하는 12월 가장 예쁜 역’ 사업을 실시 다양한 빛 조형물로 가득한 ‘광산의 겨울 정원’으로 꾸며,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빛 조형물은 내년 1월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준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이미 공동 발의했으며, 보다 강력한 형태의 특별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행정구역합치를 합치기 전에

함께 사는 지혜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선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협의체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두 지역이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상생 발전’ 관점에

서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행정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권으로 재편된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기존 초광역권과 유사한 체급을 갖추게 되며, 광주의 AI·미래산업 인프라와 전남의 에너지·해양·우주산업 기반을 결합한 광역 성장 전략이 가능해진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8개 시·군에 ‘특화주택 630호’ 들어선다

국토부 공모서 인구감소 대응 ‘전남형 만원주택’ 선정
청년·고령자 등 대상…주거와 생활 서비스 함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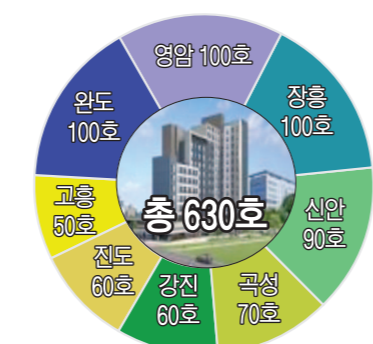
전남지역에 고령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63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지역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진도(60호), 고흥(50호), 신안(90호), 영암(100호), 곡성(70호), 강진(60호), 장흥(100호) 등 총 530호다.

완도 100호의 경우 만원주택이 아닌 군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

전남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택도시자금 등을 통해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신청을 받아 현장 평가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 등 총 23건(4571호)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확충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민주, 내달 11일 원내대표·최고위원 선출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 의혹에 전격사퇴

더불어민주당이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대신해 오는 6월까지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을 새 원내대표를 다음 달 11일 선출한다.

▶관련기사 8면
민주당은 30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원내대표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추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진행되고, 국회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시행된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대행을 맡는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진

선미 의원이,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이 맡고, 정을호·이기현·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이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한빛본부

2026년에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연말연시 되세요

친환경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